

“민간공원 檢 수사, 이용섭 시장 사과해야”

광주시의회 시의원 주장...수사 조속 마무리 촉구 광주 수화통역센터 갈등 시가 적극 대처 나서야

광주지역 이물질 수돗물에서 발암 의심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검찰 수사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도관을 전면 교체하려고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017년 152억9000여만원, 지난해 180억8000여만원, 올해 240억6000여만원을 맑은 수돗물 공급사업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만 102억1000여만원(25km), 129억9000여만원(35km), 162억5000여만원(45km)이 들어갔다. 해마다 사업량이 늘고 있지만, 전체 상수도관 3933km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은 665km에 달한다.

송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수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지하에 매설된 관 청소 등

을 위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인력, 조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남구(주월·월산동)와 서구(화정·염주동), 15일 북구(문흥·풍향동)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이거나 흐린 수돗물이 나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박미정(민주·동구2) 의원은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정성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검찰의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3대 원칙이 청렴·공정·투명이라고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현실은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공개문서의 의도적 유출, 공직기강의 해이, 행정윤리성 위반 등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야기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한 사태에 대

해 시민들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폐쇄 우려가 나오는 광주 수화통역센터 갈등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석호(민주·북구4)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농아인협회에서 최근 광주 수화통역센터를 폐쇄하기로 의결했다”며 “수화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농아인 스스로 폐지 신청하게 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센터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9월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한 달 넘기고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가 없고 일부 제출 자료도 가치가 전혀 없을 만큼 부실했다”면서 “광주시는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1만여 농아인들의 요구에는 어떤 응답도 없이 편의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의 이불 덮고 따뜻한 겨울 나세요 20일 광주시 서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불나누기 온정다지기 물품전달식'에서 박홍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과 서대석 서구청장 등 봉사자들이 축한기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겨울이불 5928채를 차량에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광주 193명·전남 1338명 공개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193명과 133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광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85명(법인 60명, 개인 125명)으로, 체납액은 84억원이다.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 중 10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은 32명 14억원

이다.

전남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388명의 체납액 규모는 783억원이다. 전남지역 공개 체납자는 개인 933명(378억원), 법인 455명(405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자는 219명(74억원)이다. 지난 2016년 개인 361명(163억원), 법인 207명(145억원) 등 568명(308억원)이었으나 2017년 1158명

(845억원), 2018년 1325명(795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공개자 가운데 최고액 체납자는 기존 공개 법인인 광양 소재 부동산업을 했던 모 업체로 취득세 등 55억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경영난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 사업 제한·신용 불량 등록 등 행정 제재도 지속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구·기업 등 수도권 집중 억제 쇠락하는 지방 살릴 특별법 절실

전남도,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토론회' 개최

인구·기업·자본 등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쇠락하고 있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그리고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출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탄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 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침체를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청년 신도시' 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연구위원은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인 상해 보상 '안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전남도, 가입 권장

전남도가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전재해 위험이 높고 있어 아직까지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줄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자격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일부 상품의 경우 84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가입 보험료의 70%(국비 50%, 지방비 20%)만 지원받

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이 당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는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사항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농업인이 기본형인 '일반1형' 보험(1인당 보험료 9만6000원)에 가입할 경우, 이 중 80%인 7만68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20%인 1만9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 5500만원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또 영세 농업인의 경우 올해부터 자부담 20%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자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www.photonicskorea.org

2019 Photonics Convergence Industry Road Show 2019

융합산업로드쇼

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9. 11. 27^수 - 28^목 (2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1 전시장

- 광융합산업 유망기술 및 제품 로드쇼
- 국내외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유관기관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 품목별 컨셉관 및 체험 홍보관 구성
- 광융합산업 신기술·신제품 전시 및 우수제품 개발업체 시상

주최 **광주광역시**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OSM** **OSK** **KITA**

주관 **KIPID** 한국광산업진흥회 **KOPTI** 한국광기술원 **OSK3C** 한국광학회 **KOPHIA** 한국광산업협회

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Tel. 062-605-9632~4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